“野,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안하면 다른 대책”

민주, 공수처 출범 당력 집중
법 개정 불사 의지 피력
이해찬 “檢 관행 깨야 민주사회 통합당, 국민의 뜻 따라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힘을 쏟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공수처 출범에 당의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면서 “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안했던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가장 고질적 분야가 검찰 분야다”고 지적했다. 또 “저도 검찰 수사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이런 수사 관행을 가지고는 민주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검찰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하고 통합당도 더 이상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는 일을 멈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출범을 위한 기반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통합당이 법적 책무를 다하는 일만 남았다”면서 “공수처는 국민이 20년 동안 열망해 온 숙원이다”고 말했다. 또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미래통합당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단 통합당의 추천위원 선임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3명 외에 교섭단체가 추천한 4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통합당의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 다방면에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이 계속 지연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특단의 대책도 ‘법 개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통합당에서 움직임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어떤 움직임도 없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백 의원은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의 선임을 요청하되 안 되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조항은 운영규칙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일단 빠졌다.

여당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을 아예 추천할 수 없는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與 의원들 “윤석열, 이제는 물러나야”

‘독재 배격’ 발언 파장…김종민 “검찰총장 정치하면 국민 피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나섰다. 설훈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발언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 독재·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되는데,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 총장은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다 상급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면서 “총장직을 유지한다면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차라리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나주화순)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는데, 많이 유감스럽고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100% 정치를 하는 것인데, 검찰총장은 정치하면 안 된다”며 “집행권을 가진 사람이 정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당 ‘뉴딜펀드’ 띄우기

한국거래소서 정책 간담회…“국채수익률+α 보장”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고 두 번째로는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 TF 단장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뉴딜 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양복이 권위 세워주나” 류호정 원피스 등원

본회의 출석 차림 놓고 비판 vs 옹호 ‘시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과 옹호가 상충하는 가운데, 일부 친문 지지 성향 사이트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는 류 의원을 향한 도 넘은 비판까지 나왔다.

한 네티즌은 5일 오전 페이스북 그룹인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에 류 의원의 복장 사진을 올리며 “본회의장에 술값 받으러 왔냐”는 내용의 글을 썼다. 일베에서도 류 의원을 향한 혐오·성희롱적 발언이 줄을 이었다.

SNS상의 수위가 도를 넘자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류 의원을 향한 비난이 성차별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본회의 때마다 중년 남성이 중심이 돼 양복과 넥타이만 입고 있는데, 복장으로 상징되는 관행을 깨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권위는 양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옷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이)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깨 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옹호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뭘 입던 무슨 상관?’이라는 글을 통해 “21세기에 원피스로 이런 범죄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한다니, 정말 이럴 때 기분 더럽다고 하는 거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복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연합뉴스

야,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착수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 선정에 착수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추천위원 선정 작업이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의 자체를 거부해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공수처가 구성되도록 하기보다는, 실제 효과를 거둘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당 입장에선 공수처 출범을 막을 뾰족한 방도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절대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원구성과 부동산법 입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법 및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단독 출범을 강행할 경우,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다만 추천위원 선정을 서두르지는 않을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만큼 헌재의 판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광주와 호흡’ 강은미 의정활동 눈에 띄네

5·18 법안·광주형일자리 정착·국비 확보 등 도움

광주 출신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법안과 예산을 챙기고 있다. 광주지역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관련 법안에도 힘을 보태면서 사실상 ‘광주의 9번째 국회의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정의당 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생명안전포럼, 국민총행복포럼, 동물복지국회포럼, 한반도평화포럼 등을 통해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또 최근에는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발의 했고 경비노동자 인권법,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국회 결의안, 전국민고용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정의당 의원 중 처음으로 대정부 질의에 나서 “한국판 뉴딜계획에 농업을 포함시키고, 2030년 탄소감축계획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제출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차별없는 전국민고용보험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광주의 최대 현안 사업인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 정착과 광주시 국비 확보에도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방부공고 제2020 - 236호

국방 · 군사시설사업계획(안)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부대 진입로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공군 00부대 진입로 확장 계획에 따라 편입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0-2 등 53필지 88,10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ㅇ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ㅇ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ㅇ연 락 처 : 02-748-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53필지		5,155,265	88,108			-	18명	-	-
1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25-6	대지	14	14	도로	농림지역	-	보성군	-	-
2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산95-6	도로	205	205	임야	보전관리지역	전남 보성군 율어면 시목길 48-**	송**	-	-
3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산95-11	임야	146	146	임야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전남 보성군 율어면 시목길 48-**	송**	-	-
4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산98-3	도로	6,149	1,637	임야, 도로	보전관리지역	-	국방부	-	-
5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산98-5	도로	2,777	865	임야, 도로	보전관리지역	-	국방부	-	-
6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산98-10	임야	1,098	1,098	임야	농림지역	전남 보성군 율어면 시목길 48-**	송**	-	-
7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산98-11	임야	1,213	1,213	임야	농림지역	전남 보성군 율어면 시목길 48-**	송**	-	-
8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산99-1	임야	38,678	878	임야, 도로	농림지역	-	산림청	-	-
9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산99-3	도로	198	198	임야	보전관리지역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5**	이**	-	-
10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산100-1	임야	1,294,314	19,052	임야, 도로	농림지역	-	산림청	-	-
11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산100-3	임야	706,458	7,206	임야, 도로	농림지역	-	산림청	-	-
12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산110-1	임야	619,811	15,241	임야, 도로	농림지역	-	산림청	-	-
13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산110-3	임야	1,597,792	1,530	임야, 도로	농림지역	-	산림청	-	-
14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산110-15	임야	75,361	194	임야, 도로	농림지역	-	국방부	-	-
15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산110-16	임야	77,448	331	임야, 도로	농림지역	-	산림청	-	-
16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산136	도로	1,885	3.0	도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건설교통부	-	-
17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	산155-2	임야	433,156	1,166	임야, 도로	농림지역	-	산림청	-	-
18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	산155-3	임야	94,745	662	임야, 도로	농림지역	-	산림청	-	-
19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0-2	도로	7,037	4,602	임야, 도로	보전관리지역	-	국방부	-	-
20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0-7	도로	103	23	임야, 도로	보전관리지역	-	국방부	-	-
21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0-8	임야	367	367	임야	농림지역	전남 보성군 복내면 복내선돌길 **	임**	-	-
22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0-9	임야	9	9	임야	농림지역	전남 보성군 복내면 복내선돌길 **	임**	-	-
23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0-10	임야	51	51	임야	보전관리지역	전남 보성군 복내면 복내선돌길 **	임**	-	-
24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3-4	임야	17	17	임야	농림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두암동)	청년조씨판윤공파 종중대표 조**	-	-
25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3-5	임야	953	953	임야	농림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두암동)	청년조씨판윤공파 종중대표 조**	-	-
26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3-6	임야	841	841	임야	농림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두암동)	청년조씨판윤공파 종중대표 조**	-	-
27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4-2	도로	5,554	2,683	임야, 도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	국방부	-	-
28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4-4	임야	227	227	임야	농림지역	전남 보성군 벌교읍 백동길 **	윤**	-	-
29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4-5	임야	117	117	임야	농림지역	전남 보성군 벌교읍 백동길 **	윤**	-	-
30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4-6	임야	500	500	임야	농림지역	전남 보성군 벌교읍 백동길 **	윤**	-	-
31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4-7	임야	311	311	임야	농림지역	전남 보성군 벌교읍 백동길 **	윤**	-	-
32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4-8	임야	38	38	임야	농림지역	전남 보성군 벌교읍 백동길 **	윤**	-	-
33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5-2	도로	992	992	임야	보전관리지역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김**	-	-
34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5-5	임야	683	683	임야	농림지역	보성군 율어면 문양리 618	이**	-	-
35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5-6	임야	46	46	임야	농림지역	보성군 율어면 문양리 618	이**	-	-
36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6-4	도로	2,479	19	임야, 도로	보전관리지역	-	국방부	-	-
37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6-6	임야	2,650	2,650	임야	농림지역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27번길 **, **1동 **3호(반월동, 신영통 **타운)	최**	-	-
38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6-7	임야	1,594	1,594	임야	농림지역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27번길 **, **1동 **3호(반월동, 신영통 **타운)	최**	-	-
39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7-1	임야	17,058	1,842	임야, 도로	농림지역	-	산림청	-	-
40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7-2	도로	13,685	2,760	임야, 도로	보전관리지역	-	국방부	-	-
41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7-4	도로	4,067	84	임야, 도로	보전관리지역	-	국방부	-	-
42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7-8	임야	2,335	2,335 지분1/2 지분1/2	임야	농림지역	서울 마포구 도화길 **, **0동 **1호(도화동, 마포 **아파트)	이** 김**	-	-
43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7-9	임야	751	751 지분1/2 지분1/2	임야	농림지역	서울 마포구 도화길 **, **0동 **1호(도화동, 마포 **아파트)	이** 김**	-	-
44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40-1	임야	44,568	847	임야, 도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	산림청	-	-
45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40-9	임야	1,644	1,644	임야	농림지역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 **6동 **5호(금정동, **아파트)	박**	-	-
46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40-11	임야	1,513	1,513	임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36번길 **(중동)	운**	-	-
47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40-12	임야	561	561	임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36번길 **(중동)	운**	-	-
48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44-4	도로	9,620	647	임야, 도로	보전관리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	-
49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44-5	임야	7,934	3,028	임야, 도로	농림지역	-	산림청	-	-
50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44-6	도로	3,570	614	임야, 도로	보전관리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	-
51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44-7	임야	4,959	1,423	임야, 도로	농림지역	-	산림청	-	-
52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44-8	목장	64,925	681	임야, 도로	보전관리지역	-	기획재정부	-	-
53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44-12	임야	2,058	1,041	임야, 도로	농림지역	-	산림청	-	-

※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57)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